
「2020-7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10. 4.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재정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 당해연도 분기별 지방재정 분석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예산·재정 관련법령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방안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과 강원도의 대응 • 지속가능한 강원도 교통 SOC 사업을 위한 제언 •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 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 역대 최대 규모, 학교 무선망(Wi-Fi) 구축 사업 본격 추진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1200만 사도민 한 목소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강원도

1. 경제

출처

■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총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의 재개로 세계교역량이 확대되는데 힘입어 반등하고, 총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세에 따라 재화수입을 중심으로 증가 예상
- 중기 전망시계인 2020~2024년 기간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 수준에서 연평균 1.6%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향후 5년 기간 중 실질 GDP 성장률 흐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역성장한 후 2021년 회복세에 진입하여 2022년 2.8% 성장률 고점을 형성하고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되어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추정, 특히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바로가기](#)

■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2020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로, 지난 30년간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소득은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렀고, 실업률은 양 지역의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에 도달함
 - *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정부가 2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임
-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값비싼 대가를 통한 성공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동독 연방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통일 초기에 비해 동독의 총고정자본형성, 투자집중도, 노동생산성 등이 감소하고, 혁신역량과 혁신주체의 부족, 동독 연방주정부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경제수렴 속도가 둔화되어,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해야 함
- (결론 및 시사점) 독일 방식의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양측이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남북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018년 남북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 1인당 GDP의 80%에 도달하기 까지 연간 8%의 성장률 격차로 3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계층을 지원하고자 7.8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추경안이 동일 연도에 네 번째로 제출되는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추경 규모를 합산하면 66.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책대 정책을 추진
-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별 4개의 패키지로 구성되며, 세부내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8조원,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 2.2조원임.
-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5조원,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0.3조원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118.6조원 적자로 제3회 추경 대비 7.1조원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 GDP대비 43.9%를 기록할 전망이다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 (지방재정의 현황)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일반재정의 통합재정 규모는 2020년도 수입 229조 5,880억원, 지출 252조 2,743억원이며, 교육재정 규모는 73조 9,014억원임 ⇒ 본 보고서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에서는 통합재정 규모 등 현황 및 지방재정 통합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를 보여주고,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 관계부처 합동)의 이행결과를 반영하고 역대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재정지표 추이를 분석·서술함
-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법령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구현해야 할 결과로서 건전재정 운영, 국가시책 구현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성과중심 운영, 성인 지적 운영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운영원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과정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서술함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을 통한 지방공공서비스의 확충, 지역간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등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임 ⇒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에서는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조정제도와,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서술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당해연도 분기별 지방재정 분석방안 연구

-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현행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은 재정건전성(6개), 재정효율성(7개), 재정책임성(1개) 3개 분야 내 14개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평가
-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재정분권, 신속재정집행,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정환경 변화 관련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을 유도
- (2020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 전년도에 이어 역시 국가경제 침체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 대한 재정운용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표체계 구성
 - ① 재정건전성 분야 등급화 평가방식 도입: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에 대한 평가 등급기준 설정 및 등급화 도입
 - ② 재정효율성 신규지표: 세출관리 중 내부경비관리 지표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 지표 등을 포함하여 대표 지표 발굴
 - ③ 재정계획성 분야 신설: 예산의 계획관리 및 집행관리에 대한 자체 계획능력 강화를 위한 유도→재정계획과 재정집행에 대한 유도 지표 발굴
 - ④ 당해연도 데이터를 이용한 분기별 분석 시범실시: 당해연도 재정운용노력·시책 대응에 관련된 신속집행 등 재정운용노력에 관한 분석 실시, 당해연도 데이터를 사용한 분기별 분석 실시(2회, 3~4분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0.9.8. 시행 '21.1.1.)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

[바로가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개정 '20.9.11. 시행 '20.11.1.)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정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의 횟수 확대,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바로가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0.9.29. 시행 '20.10.1.)

법제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 * 보조사업 등을 완료한 보조사업자 등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바로가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0.9.29. 시행 '20.10.1.)

법제처

- 「국유재산법」의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국유재산에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기 위한 승인절차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 신청절차 등을 정함
 -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국유재산에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총괄청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사용예약 제도 도입
- 정부가 보유하는 증권 등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추가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배경) 경제의 디지털화로 공유경제(Sharing and Gig economy)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경제활동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OECD 조세행정포럼은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위해 과세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발굴·제시함
- (주요내용) 과세당국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게 적합한 과세 최소요건 및 과세지침 등을 개발하고 납세의무 등을 홍보·교육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 제고와 공유경제 공급자의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법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유경제 공급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공급자 관련정보에 대한 과세당국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사점) 공유경제 공급자의 자진신고 환경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 조세 정책적 목표달성 등을 위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 기본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프랑스·호주 등의 공유경제 과세 관련 캠페인 사례를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2020년 6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신종업종 세정 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고령화 및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복지 등의 일부 지나친 선심성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책임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농민수당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에 필요한 충청북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대상) 충청북도와 농민수당제도를 도입한 타 지방자치단체
- (연구내용) 현행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농민수당제도의 의미 검토, 현행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지자체의 재정현황 검토, 충청북도 농민수당 도입 후 재정과급효과 분석
 - * 충청북도 재정과급효과 분석 결과: 충북 본청 및 시·군의 2019년도 당초 기준재정수요는 60,987억원이며, 농민수당 도입 시 기준재정수요는 △720억원이 감소한 60,267만원이며,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지표값이 일제히 하락함
- (정책 제언)
 - ① 농민수당의 차등지원제도로 개선 필요: 농민수당은 농가 전 대상의 소득 및 자산의 기준 없이 부여하는 특성으로 소득보장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소득보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저소득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고려 필요
 - ② 농민수당의 일몰제 적용: 지자체 특별회계의 일몰제와 같이 경직성이 강한 지출에 관한 사업의 경우에는 한시 적용 후 처음부터 다시 적용
 - ③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영향평가제도 활용: 지자체 재정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자체 재정운용의 재정책임성 확보 요구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방안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환경보호와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과세대상인 자원을 활용·개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있음
 - (낮은 세율) 화력발전이 야기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1.0원/kWh인 원자력발전이나 2.0원/10m³인 발전용수에 비하여 화력발전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0.3원/kWh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개선책 필요성)
 - ① 화력발전이 부과되는 이러한 낮은 세율은 수익자부담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라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 정당성에 위배되는 체계임
 - ②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화력발전이 따른 외부비용은 향후 증가 예상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화력발전이 따른 외부비용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해당 지방정부가 이러한 피해를 관리·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세수증대 효과)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국세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 제시
- * 세율 인상 시 강원도 세수증대 효과: 0.6원 적용 시 52억원, 1.0원 적용 시 121억원, 1.5원 적용 시 207억원, 2.0원 적용 시 293억원 증대 효과

[바로가기](#)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과 강원도의 대응

- (2021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본방향)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55.8조원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산업·환경·R&D, 복지·일자리, SOC 등 관련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한 슈퍼예산이 편성됨
- (예산안의 주요내용)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이라는 전략과제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의 4대 투자 중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총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강원도 예산확보 성과) 강원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1,728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함. 분야별로는 4차산업·R&D·일자리 등 경제 분야 5,799억원, SOC분야 1조 4,015억원, 문화·관광·체육 및 폐광지역개발 분야 2,842억원, 복지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1조 8,707억원, 농·림·축산·해양·수산·환경 분야 9,213억원, 안전·통일·국방 등 간접분야에 2조 1,152억원의 국비예산이 반영됨
- (향후 대응방안)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도 있는 상황으로 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가 감액 편성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내실화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쇄하는 자구책이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강원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속가능한 강원도 교통 SOC 사업을 위한 제언

강원연구원

-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및 최근의 변화)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9년 5월 운용 및 수행지침 개정으로 정책성 분석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성 분석 체계가 개편됨
-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경향 및 시사점) 2018년까지 종합평가 타당성을 확보한 교통 SOC 사업 중 경제성분석 결과가 가장 낮은 사업은 춘천~속초 (B/C 0.79)이며, 대부분 B/C 0.9 이상 확보해야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B/C가 0.46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타당성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및 정책성분석' 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개선된 예타제도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방향) 결과적으로 이전에 비해 강원도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용이해졌으나, 추후 정부 재원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개선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예상되므로, 강원도는 현재의 완화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 (SOC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제언) 첫 번째로, 강원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강원권 국가교통DB 구축사업에 공동참여(국토교통부와 1:1 매칭펀드)하여, 지역의 여건 반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 수행 시 최근의 여건 변화를 감안한 '정책성 분석'에 비중을 높여, 정책효과 관련지표를 발굴하고 지역의 여건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바로가기](#)

■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
학회

- (서론) 예산이월은 공공서비스의 단절 또는 지연을 의미하는데, 지방정부는 이러한 예산이월제도를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2015년부터 지방정부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집행기간부족에 따른 예산이월의 명분도 얻게 됨
-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분석 결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이월률과 단위이월건수는 증가하였는데, 하위 계층의 지방정부와 재정운용능력이 낮은 지방정부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월규모 증가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이월규모는 출납폐쇄기한 단축 이후 점증하고 있음
- (결론) 출납폐쇄기한 단축을 전제한다는 입장에서 제도변경에 따른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회계법」의 출납정리기한을 연장하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관련 지표 중 이월항목을 신설, 재정수지 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재정운용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 (三重苦의 지방재정) 코로나19 확산과 재확산으로 경제 전망은 어두워지고,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소비의 축소는 국세와 지방세 세입의 감소를 불러오게 되며, 이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방세출수요의 증가를 일으킴
- (지방재정의 역할)
 - ① 정부재정의 기능 중 소득 분배와 경제 안정화 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자원배분 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구분과 그에 따른 재정기능의 분할은 의미가 열여지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각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
 - ② OECD는 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저금리 기조 유지와 지속적 대출 공급을 통해 완화적 통화·금융정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 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③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세입 부문은 지방세 간접지출 확대(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제도 활용), 지역의 생산과 소비 및 납세 활동이 활발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세지출 수단의 활용, 단기 지방채 발행 정책 등이 필요함
 - ④ 세출 부문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단기적 적극 투자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 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운용이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5. 뉴스브리핑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OECD는 9.16.(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 금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 대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신흥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반영해 대체로 하향 조정
-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2위로 예상되며, 6월 전망 대비 +0.2% 상향 조정된 △1.0%로 전망
- 한편, 세계경제는 '21년에 반등하겠으나 터키, 미국, 우리나라만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금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망
 - ※ 아울러, OECD는 불확실성 완화 등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권고가 우리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있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 정부는 9.29.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함
 - ②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회의 의결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함
 - ③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 재정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함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공적자금 I 운용은 '97.11.~ '20.6월까지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117.2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9.5% 수준임
 - * 공적자금 I: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조성(1997~2002년)
 - * 공적자금 II: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설치(2009~2011년, 2014년 운용 종료)
- '20년 2/4분기 중에는 4,115억원이 회수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예금보험공사 2,877억원, 정부 1,237억원임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5. 뉴스브리핑

출처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마감 결과 전국 2,216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이 사용되어 지원금의 99.5%가 기한 내 사용완료 되었다고 밝힘
- 한편, 신청 시(또는 신청 후) 기부를 선택한 모집기부금은 15.7만건, 287.5억원이며,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한 의제기부금은 58만건, 2,516억원으로, 총 긴급재난기부금은 73.7만건, 2,803.5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됨 → 해당금액은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될 예정임
- 지급수단별 사용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9조 5,796억원(99.6%), 선불카드 1조 8,241억원(99.1%), 지역사랑상품권 6,619억원(99.0%)임
- 업종별 사용현황은 마트·식료품 2조 5,143억원(26.3%), 음식점 2조 3,251억원(24.3%), 병원·약국 1조 172억원(10.6%), 주유 5,788억원(6.1%) 등임
- 매출규모별 사용 현황은 영세한 중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에서 6조 725억원(63.5%), 대형기업(연매출 30억원 초과)에서 3조 4,866억원(36.5%)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영세기업(3억 이하) 사용은 2조 3,787억원(24.9%)임

[바로가기](#)

■ 역대 최대 규모, 학교 무선망(Wi-Fi) 구축 사업 본격 추진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에 대한 사전 규격공고(9월중)와 입찰공고(10월중)를 거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임
 -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은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일반교실에 무선망(Wi-Fi)을 설치함으로써 스마트기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온라인 등교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비 1,481억원과 지방비 2,22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0만 9천여 교실에 무선 공유기(AP)를 설치할 계획으로, 20만대를 넘는 물량은 정부, 지자체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함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한국판 뉴딜’의 취지를 반영한 계약·입찰 방식을 결정하였는데,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12개 권역별로 사업을 분할하고,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시 평가지표에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와 지분율을 반영할 계획임
 - 또한,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5종의 무선 공유기 장비를 함께 제안토록 의무화하였으며,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기여 제안사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
-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1개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하며, 약 11만 실에 무선공유기 구축사업을 추진함

* 11개 교육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지역이며, 6개 교육청(대구,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1200만 시·도민 한 목소리

- 강원·인천·충남·전남·경남 등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지난 21~22일 국회·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함
- 이번 건의문 채택은 “화력발전은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데 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가중되는 등 높은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인상 시 전국적으로 2,673억원(강원 12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확보 시 마련된 재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지역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할 계획임

강원도

[바로가기](#)